

이슈브리프 862호  
(2026. 7.10)

## K-방산 2.0 도약을 위한 전략과제 및 정책방향: CPSP 교훈과 나토 방산포럼 성과를 중심으로

## 제862호

이성훈 [abcd0159@inss.re.kr](mailto:abcd0159@inss.re.kr)  
진아연 [ayjin@inss.re.kr](mailto:ayjin@inss.re.kr)



## 국문초록

2026년 7월 K-방산의 향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계기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잇달아 전개되었다. 7월 6일 캐나다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계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하였고, 이튿날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방산포럼에서는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본 브리프는 이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방산 2.0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PSP는 성능·납기에서 우위에 있던 한국이 상호운용성에 방점을 둔 후속 군수지원 중심의 배점체계와 나토 동맹 협력의 실효성 앞에서 정량적 강점을 결정적 승부수로 이어가지 못한 사례이다. 그 배경에는 나토 안보 동맹에 기반한 상호운용성의 오랜 축적, 북극 안보협력 참여 자격, EU 방산 자강 프레임워크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한다. 반면 앙카라 방산포럼에서는 연 15조 원 규모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입 기반이 마련되고, 방산 생태계 연계 발판이 확보되었다. 더불어 미 군함 건조 협의, 한미일 SMR 협력각서 등 방산 협력 패키지 성과가 병행 도출됨으로써, 이러한 구조적 제약에 대응할 초기 진입로가 마련되었다.

이 두 사안은 K-방산 2.0으로 도약에 다음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가격 경쟁력, 납기보장 등 K-방산 1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며, 안보협력 변수가 상수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후속군수지원과 총수명주기지원(LCS)이 글로벌 표준 평가체계로 자리 잡고 있으며, 셋째, 표준·인증·인력의 통합으로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넷째, 지역 안보인식과 전략적 이해의 정합성 없이는 관련 시장 진입 자체가 제약될 수 있음이 CPSP에서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방산은 조선·원전·에너지와 결합된 안보 협력 패키지의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향후 정책적 방향으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협력 프레임워크와 상시 현지 네트워크 구축, △조선, 해양, 항공우주, 인공지능 등 협력 분야 및 중동, 동남아, 남미 지역 등으로 협력 다변화, △상호운용성 인증체계의 조기 확보 및 단순 조립·부품 생산을 넘어 설계, 원천기술 등 지식재산권 공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 △초격차 기술군에 대한 R&D 집중 및 나토 혁신생태계와 연계, △K-방산의 성과 평가 체계를 단순 수출규모를 넘어 파트너 다변화율, 총수명주기지원 자립도, 초격차 R&D 수준, IP·설계권 보유율, 외교적 선택지와 전략적 자율성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K-방산 2.0, CPSP, 나토 방산포럼, 상호운용성, 안보협력 패키지, 후속군수지원(LCS)

2026년 7월 K-방산의 향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계기가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잇달아 전개되었다. 7월 6일 캐나다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초계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함으로써 K-방산의 유럽 선진시장 진입에 중대한 과제를 남겼으며, 이튿날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및 방산포럼에서는 한-나토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담론 등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되었다. 본 브리프는 이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K-방산 2.0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CPSP의 추진 배경과 선정결과 분석

CPSP는 캐나다 해군이 1998년 영국으로부터 도입한 중고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최대 12척 규모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7월 사업을 공식화한 뒤 같은 해 9월 정보요청서(RFI)를 발행하여 관심 있는 조선업체들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2025년 8월 한화오션과 TKMS를 적격후보(short-list)로 선정하였다. 이어 제안요청서(RFP) 접수와 수정 제안 절차를 거쳐 2026년 7월 6일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였다.

한국은 '팀코리아' 체제를 가동하여 참여하였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하고, 국방부·해군·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가동되었다. 2026년 5월에는 도산 안창호함(KSS-III 배치-1)이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해군기지에 입항, 해군 연합 훈련을 통해 장거리 작전 지속성을 실증하였다. 산업협력 측면에서도 첫 잠수함 조기 인도라는 파격적 납기 조건과 함께, 2044년까지 약 70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교역·투자 효과, 연평균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온타리오주 알고마스틸(Algoma Steel)에 대한 약 3억 4,5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그 원인은 정량적 평가 기준과 안보·동맹이라는 정성적 변수의 상호작용 속에서 규명될 필요가 있다.

### *CPSP 평가배점 체계와 항목별 다층 분석*

우선 선정기준에 있어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CPSP 평가 배점은 후속 군수지원 능력 50%, 잠수함 성능 20%, 비용·재무 15%, 경제 및 전략적 가치 15%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후속군수지원에서는 TKMS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TKMS는 지금까지 20개국에 140여 척의 잠수함을 수출하며 NATO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에 잠수함을 공급해 온 전통적 강자이다. 특히 독일과 노르웨이는 이미 2021년 7월 약 55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통해 동일 함형인 212CD를 공동 발주한 바 있으며, 이를 캐나다에까지 확장하는 3국 협력체계를 제안하였다. 카니 총리가 발표에서 TKMS의 NATO 잠수함 공급 이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러한 우위를 상징적으로 부각한 대목이다. 반면 한국의 KSS-III는 아직 한국 해군만이 운용하고 있어, 뛰어난 기술과 운용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비·훈련을 함께 수행할 동반국이 부재하다는 점이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성능·납기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었으나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KSS-III 배치-II 장영실급(3,600톤급, 2024년 진수)은 리튬이온 AIP와 VLS 기반 잠대지 미사일 운용 능력에서

강점을 지녔고, 도산 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으로 실전 신뢰성을 실증한 반면, TKMS의 212CD는 노르웨이 초도함 인도가 2029년에야 예정된 미검증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TKMS는 독일·노르웨이의 기존 발주 물량 생산 순번을 조정해 캐나다에 첫 4척을 조기 인도하겠다는 방안으로 한국의 납기 우위를 상당 부분 상쇄하였고, 성능보다 후속군수지원에 더 높은 배점이 부여된 평가 구조 자체가 한국의 정량적 강점이 결정적 승부수로 작동하기 어렵게 하였다.

셋째, 비용·재무 항목은 최종 계약가격과 금융조건이 향후 협상에서 확정되는 성격상, 현 단계에서 양측의 상대적 우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조기 납기와 총수명주기비용 절감 방안을 통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TKMS 역시 독일·노르웨이와의 공동운용 체계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수명주기비용 절감, 이행위험의 분산 가능성을 부각시켰다. 결국 이 항목은 단순한 제안 가격이 아니라 후속군수지원, 납기, 공동운용체계 등 여타 평가요소와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경제 및 전략적 가치 항목은 산업기여도(ITB)와 장기적 안보·경제 협력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국은 현지 기업 협력, 생산기반 확충, 투자·고용 창출 등 캐나다 국내 산업에의 직접 기여를 강조한 반면, 독일은 캐나다를 212CD 공동운용체계와 유럽 방산 공급망에 편입시키는 장기적 전략 가치를 부각하였다. 특히 독일은 캐나다산 LNG·핵심광물의 유럽 수출, 치칠항 북부 인프라 개발, 앨버타 탄소 포집시설 등 캐나다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과 연계한 협력안을 경쟁 후반부에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성능·납기의 정량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상호운용성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였다. 반면

독일은 NATO 제도적 기반이라는 초기 우위에 납기·산업·경제협력 제안 보완이라는 후반 대응을 결합함으로써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안보·동맹 변수의 다층적 작용

최종 결과는 CPSP의 공식 평가 기준에 따라 도출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안보·동맹 환경, 유럽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 기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안보·동맹 변수, 특히 NATO와의 상호운용성 격차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방산 당국이 지적한 바와 같이, 승조원 공유(crew-sharing)까지 가능한 수준의 협력은 장비 규격 호환을 넘어 NATO가 70여 년간 축적해 온 제도·인증·정보공유 체계의 산물이다. 캐나다·독일·노르웨이의 '팀 212CD'는 사실상 단일함대에 준하는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으며, 이는 한국이 단기간에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적 격차였다. 방산 당국의 "인도·태평양 협력은 앞으로 만들어가는 일인 반면, 대서양의 동맹관계는 70년간 작동해 온 현실의 문제"라는 평가는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변수는 북극 안보협력에 대한 참여 자격의 격차였다. 캐나다는 2024년 「캐나다 북극 외교정책」을 통해 러시아·중국의 북극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자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CPSP를 북극 감시·기동 능력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독일은 노르웨이와의 지리적·산업적 연계를 바탕으로 캐나다 북극 현대화 구상에 자연스럽게 접속할 수 있었던 반면, 한국은 지리적·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이러한 장기적 북극 안보협력 구도에 편입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었다.

방산 당국의 "우리에게 북극은 개념적 수준의 관심이지만, 캐나다에서 북극은 매우 현실적인 안보 관심사"라고 시인한 대목은, 정책 참여 자격의 격차가 사업 결과에 미치는 무형의 영향력이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방증한다.

세 번째는 유럽연합의 방산 자강 프레임워크와 그 파급 효과이다. 최근 EU가 추진 중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는 회원국 공동조달을 촉진하는 1,500억 유로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EDIP(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EDF(European Defence Fund)와 함께 유럽 역내 방산 자립화의 제도적 축을 이룬다. 이들 프레임의 공통 원칙은 EU 역내 부가가치 65% 이상, 제3국의 IP·설계권 통제 배제이다. 캐나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캐나다·독일·노르웨이 간 '팀 212CD' 삼각 협력을 통해 유럽 방산 생태계와 한층 긴밀하게 연계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이 유럽 및 유럽 연계 시장에 진입할 때 완제품 수출을 넘어 유럽 파트너와의 공동설계·공동생산 및 IP 공유를 전제로 하는 협력구조를 수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 변수들의 작동은 CPSP에서 처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폴란드 오르카(Orka) 잠수함 사업의 경우에도 발트해 해양안보 담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으며, 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 후속 물량 및 정비 협력에서 유럽 역내 정비체계와의 정합성을 강조해 온 흐름 역시 같은 맥락에 위치한다. 요컨대 유럽 진영에서의 성패는 정량 지표와 더불어 논의 변수들의 관리 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K-방산은 이 조건을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상수적 조건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국면에 있다.

##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방산포럼의 성과와 분석

CPSP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26년 7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최된 NATO 정상회의와 방산포럼을 계기로 유럽 방산시장의 진입장벽에 대응하려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IP4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급 인사로 자리하여 나토 내 한국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였다. 이번 참석을 통해 도출된 성과는 다음의 다섯 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담론의 공식 제시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제4세션 기조연설에서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히고, "각 국가가 표준, 생산 방식, 관행이 다 다를 텐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언급의 전략적 의의는 K-방산의 협력 단계를 단순 '판매'에서 '공동 연구·생산·운용'으로 끌어올리자는 인식 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CPSP에서 확인된 최대 약점인 '운용 동반국 부재'와 '나토 통합성 결여'는 완제품 수출 방식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파트너십 2.0은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한-나토 조달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협상 공식 개시

이재명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조달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공식화한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성과이다. 이 성과의 실질적 의미는

단순한 '시장의 확장'을 넘어 '표준·인증 체계의 정합성 확보'에 있다. CPSP에서 확인된 후속군수지원 배점 50%의 벽은 결국 우리 방산 체계가 나토 표준·인증 체계와 얼마나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조달기본협정은 이러한 표준·인증 정합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 나토 총수명주기관리(LCM) 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진입로를 여는 첫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 다국적 협력사업 옵서버 참여 확대 및 혁신생태계 진입

한국은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분야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으며, 나토 혁신훈련장과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SpaceNet)'에도 국내 기업의 참여가 추진된다. 이 성과의 본질은 단순한 조달 시장 참여를 넘어 나토 방산 생태계 자체로의 진입에 있다. 이미 나토 표준(STANAG)을 충족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55mm 자주포용 모듈장약(MCS)이나 풍산의 155mm 포탄 등이 실질적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할 여지가 열렸을 뿐 아니라, 완제품 수출에 머물던 협력의 층위가 미래전 대응 역량을 나토 회원국과 공동으로 개발·축적하는 단계로 확장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는 단기적 수주 실적을 넘어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전략적 자산의 성격을 갖는다.

#### 방산·조선·원전을 아우르는 안보 협력 패키지 병행 성과

양카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협력과 병행하여 조선·원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미 군용 선박 건조 협의를 이어갔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각서가 체결되었다. 이는 방산 협력이 조선·

원전·에너지 안보를 포괄하는 패키지형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독일이 CPSP에서 잠수함 계약을 LNG·핵심광물·북부 인프라와 연계해 접근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 역시 이러한 연계형 협력 방식을 전략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CPSP 및 나토 방산포럼의 시사점

앞의 두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K-방산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가격경쟁력, 납기 보장 등 K-방산 1기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장점들이 향후 수주 성공을 담보하는 절대적 조건은 아니라는 점이다. 안보동맹 중시의 블록화와 자국 방위산업 우선정책은 방산시장의 상수(常數)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대형 방산수출에서는 동맹과 안보 변수의 무게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앙카라 나토 방산포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표준, 생산 방식, 관행의 통일"과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한 것은, 동맹 기반 방산 협력체계로의 편입을 K-방산의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기 시작하였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둘째, 후속군수지원과 총수명주기지원(LCS)이 글로벌 표준 평가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후속군수지원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글로벌 방산시장의 표준적 평가 체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완제품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부품·기술자료·인력·교육을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수명주기지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앙카라에서 도출된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와 방산 원자재 옵서버 참여는 이러한 총수명주기지원 생태계에 우리 방산이 접속할 수 있는 초기 인프라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표준·인증·인력의 통합으로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CPSP에서 독일·노르웨이·캐나다의 '팀 212CD' 삼각 파트너십이 승조원 공유 수준의 통합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호운용성이 단순 규격 호환의 문제가 아니라 표준·프로토콜·인력의 통합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개별 사업 단위의 인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지속적 참여 체계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앙카라에서 확인된 나토 혁신 훈련장 스페이스넷 등 생태계 참여 성과는 바로 이 지속적 참여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안보인식과 전략적 이해의 정합성 없이는 관련 시장 진입 자체가 제약될 수 있음이 CPSP에서 확인되었다. 캐나다의 북극, 폴란드의 발트해, 그리스·이탈리아의 지중해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별 안보협력체계의 구성원 지위는 대규모 방산계약의 실질적 전제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보여준다.

다섯째, 방산은 조선·원전·에너지와 결합된 '안보 협력 패키지'의 성격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독일이 CPSP에서 잠수함 계약을 LNG·핵심광물·북부 인프라와 연계한 '패키지 딜'로 접근하여 성공한 사례, 그리고 앙카라에서 미 군함 건조 후속협의 및 한미일 SMR 협력각서가 나토 방산 성과와 병행 도출된 사실은, 방산이 더 이상 독립 품목의 수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협력의 한 구성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K-방산 2.0 시대의 협력 방식은 개별 무기체계의 수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력의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K-방산 2.0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이러한 시사점을 실천적 전략 과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책 방향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 협력 프레임워크와 상시 현지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부·국방부·국정원·방사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 주요 파트너국별 중장기 협력 로드맵을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학계·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체를 통해 파트너국별 안보·산업 환경 분석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평시부터 현지 정부·의회·군·산업계·연구기관·지역사회와 관계를 축적하는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앙카라에서 개시된 조달기본협정 협상 역시 이러한 상시 협력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상호운용성 인증체계를 조기에 확보하고 현지화 전략을 고도화하여야 한다. NATO 표준화 협정(STANAG) 인증과 NATO 총수명주기관리 참여를 전략 과제로 격상시키고, 데이터·소프트웨어·표준의 상호운용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지화도 단순 조립·부품 생산을 넘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등 지식재산권 공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럽 방산 자강 프레임워크의 역내 부가가치 요구에 대응하는 현실적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현지화가 국내 방산의 보조 생산기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IP와 설계권의 핵심 범위는 국가전략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파괴적 혁신을 통해 압도적 기술격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동맹과 진영 중심의 구조적 제약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 우위는

이를 상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잠수함 분야만 보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AIP 3세대 기술, 무인 자율운항 잠수정, AI 기반 소나·전투체계 등 유력한 초격차 기술군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방산 R&D 예산을 이러한 파괴적 혁신 분야에 집중하고, 국방과학연구소·민간기업·대학이 참여하는 초격차 R&D 클러스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앙카라 방산포럼에서 제안된 첨단기술 공동연구 확대를 활용해 국내 R&D를 나토 혁신생태계와 연계함으로써, 국내 기술 성과가 국제 표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K-방산의 성과평가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성과평가는 수출 실적과 신규 계약 규모에 주로 의존해 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파트너 편중, 지식재산권 유출, 특정 진영에 대한 의존 심화 등의 전략적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앞으로는 단순 수출액을 넘어 △파트너 다변화, △총수명주기 지원 역량, △초격차 기술 확보 수준, △IP·설계권 보유, △외교적 선택지와 전략적 자율성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의 성과도 조선·원전·에너지·인프라와 결합된 안보협력 패키지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체계와 접근 방식이 정착될 때 K-방산은 개별 사업의 성패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